

담당부서 : 전략산업과

담당자 : 김은정 주무관

연락처 : 055-211-3114

경상남도·밀양시, 하남뿌리특화산단 투자 프로젝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추진

- 2024년까지 3,500억 원 이상 직접투자 및 500여 명 직접고용 신규 창출 기대
- 6월 말까지 노사민정 협의회 논의, 노사민정 상생 협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 위해 최선

경상남도가 밀양시와 함께 노사민정 협력을 바탕으로 하남일반산단을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6월 5일(수)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환경의 날’ 행사로 경남을 방문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산업부 장관은 경남 밀양 상생형 일자리 성사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지역 주민의 협조 하에 뿌리기업의 입지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투자를 창출해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모델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모델을 통해 2024년까지 3,500억 원 이상의 직접투자과 500여 명의 직접고용이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일반산단’은 2006년 1월에 주물 관련 업체 42개 기업이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6년 3월부터 조합과 하남산단 입주예정 업체들의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주물단지 조성 반대 집회로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며 산업단지 조성이 장기화됐다. 현재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나, 경기 불황과 산업단지 조성 장기화에 따른 이전 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분양권 반납과 투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물산업 특성상 충분한 환경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준공 이후 환경민원 발생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올해 초부터 하남조합, 중앙부처와 상생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의해왔으며, 하남일반산단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지정 받아 기업의 투자 촉진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뿌리산업은 기계·자동차·조선 등 경남 주력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곧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될 것이며, 특히 최근 어려워진 일자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과 밀양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노사민정 협의회 논의, 노사민정 상생 협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경상남도과 밀양시는 균특법 개정 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지원할 예정임**

※ 첨부 : 참고자료(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 및 패키지 지원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략산업과 김은정 주무관(055-211-31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

-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① 지역 경제주체 간 (노·사·민·정) ②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③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④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 대상 및 요건

① 대상

: (기업)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역) 수도권 외 지역

② 요건

- ❶ 지역 경제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 체결
- ❷ 지역·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 고용규모 및 투자규모 설정

□ 패키지 지원 내용 (파란색은 법 개정사항)

구분	지자체	중앙정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기업 투자비 일부에 대해 보조, 예:10%) ·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 장기임대, 수의계약 허용 · 관내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 부동산 취득세 50%이상 감면·재산세 75% 감면(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 (年 임대료 인하 : 조성원가 3→1%) · 펀드지원, 中企 전용자금 마련, 우대보증 공급(보증료를 감면 등) · <u>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가산 및 한도 상향</u> · <u>국유지 대부요율 인하, 장기임대·수의계약</u> · <u>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u>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동지원 · 산단 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등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정부 지원금 확대 ·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우대 지원 ·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지원(3년) · 복합문화센터 등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 지역 직업계고·전문대 맞춤형 교육